

'이정현 지도부' 퇴진 놓고 내분 폭발

새누리당이 7일 '이정현 지도부' 퇴진을 둘러싼 내분으로 혼란을 치렀다.

유일한 비박계 지도부인 강석호 최고위원은 이날 공식 사퇴를 선언했고, 친박계 지도부는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며 이정현 대표 지키기에 나섰다.

지도부 동반 퇴진을 압박하며 사퇴를 예고했던 강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제가 사퇴하더라도 많은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언제까지 이것만 마무리하고 사퇴하겠다"는 최소한의 로드맵이라도 내놓길 부탁한다고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끝까지 지도부와 함께 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고, 양해해줄길 부탁한다"며 "저를 뽑아준 당원동지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 최고위원의 사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친박계 지도부는 '선(先) 수습, 후(後) 퇴진' 입장을 밝히며 이정현 대표 지키기에 나섰다. 이 대표 역시 "비대위를 꾸린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라며 사퇴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직후 브

강석호 최고위원 "최소한의 로드맵 제시하라" 사퇴 친박계 지도부 "사태 수습이 우선" 대표 지키기 나서 이정현 대표 "박근혜 대통령 도울 시간적 여유 달라"

리핑을 통해 "지금 너무 엄중한 시기인 만큼 지도부도 국가적 혼란을 없애기 위해 단합해서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하기로 했다"며 "최고위원들이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지도부 퇴진 거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정현 대표는 "당대표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도울 수 있도록 조금만 위기관리의 시간적 여유를 허락해 달라"고 비박계의 사퇴 요구를 최종 거부했다.

그는 "한 간교한 사람의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평생 쌓아온 모든 명예, 업적, 수고를 다 잃었고, 우리 새누리당은 폭탄 맞은 집이었다"며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최순실' 한 사람에게 돌렸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어차피 당은 폭탄 맞은 집이고 금이 간 무너진 저수지 같은

상태"라며 "비상 상황인 것은 맞지만 당장 급하게 원칙 없이 비대위원을 꾸린다고 금방 새롭게 재건축되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안이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비박계를 비판했다.

그는 "어차피 천지개벽할 만큼 변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의 존재는 있을 수가 없게 된다"며 "기왕 이렇게 된 것 서두르지 말자"고 말했다.

주요원 최고위원도 "새 내각이 구성되고, 이 국면이 수습되는 상황이 오면 지도부의 진퇴 결정도 해야 한다"며 "그때까지는 이정현 대표를 중심으로 함께해야 한다"고 '이정현 지도부' 퇴진 요구를 거부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정현 대표는 최고위를 통해 특별검사 수용, 거국중립내각 수용, 청와대 인사 개편 등 많은 것을 직접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건의했다"며 "외부에서

이런 모습을 잘 모른다. 이같은 직접적인 건의를 바로 대통령께서 받아들여 실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 대표가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할 유일한 창구임을 강조했다.

이정우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라는 배가 난파 직전이다. 난파 직전에 있는 새누리당호의 선장도 뛰어내리라고 하고, 항해사도 뛰어내리라고 하고, 책임있는 사람들을 다 뛰어내리라고 하면 그 배가 폭풍우를 뚫고 나갈 수 있겠느냐"며 "적어도 폭풍우를 뚫고 나가 고요한 바다가 아니라도 항해할 수 있는 바다가 됐을 때 그때 새로운 개혁과 쇄신을 하는 게 마땅한道理"라고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최연혜 최고위원 역시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 중진, 국가 원로 간 비상시국대책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 현 상황을 타개하는 데 의견을 모아주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이 대표가 이런 것을 권의도 하고, 적극 추진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나라가 정상 운영 되는데 앞장서셨으면 한다"고 이 대표에 힘을 실어줬다.

한편 '이정현 지도부'의 동반 사퇴를 주장했던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 불참했다. /뉴스

"전대주 베트남 대사, 최순실 일가가 임명"

인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베트남 전대주 대사를 최순실 씨 일가에서 임명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문화·교육·체육 등 부분에만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더 크게 해먹은 것은 국방·외교·안보 이쪽일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 나는 2014년 가을에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2014년 가을에 베트남에 갔는데 호찌민 교민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있었다"며 "대통령 조카가 호찌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조카를 도와주기 위해서 최순실 씨 언니 되는 사람이 민간인인 전대주 대사를 청와대에 추천해서 대사로 만들었고 김 모 영사가 그 조카를 위해 일종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재학 총영사는 굉장히 원칙주의자인 외교관 출신이라서 대통령의 조카라는 사람의 사업을 (대사가) 도와주는 과정을 못 마땅히 여겨서 대사 측과 불화설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그 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이미 최순실 씨가 국정 농단을 넘어서 해외에 외교 라인에도 손을 뻗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그 당시 인지를 했다"며 "이는 외교 라인에 최순실 라인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

노회찬 "미르 출범한 바로 그 날 박 대통령 노동약법 추진 발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미르재단이 출범한 바로 그 날 박 대통령은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5대 노동약법을 수용하고 추진할 뜻을 밝혔다"며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대가로 대기업들이 원하는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하야 촉구 지역위원장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민중의 생존권을 팔아먹는 추악한 거래가 여기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7월24일 박 대통령은 17명의 대기업 총수들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K스포츠와 미르 재단설립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모금을 강요했다"며 "8월31일 전경련은 대통령에게 5대 노동 약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9월16일 새누리당은 이를 당론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10월 25일과 26일에 걸쳐 900억원의 돈을 모금했다"며 "그리고 10월 27일 바로 그 날 미르 재단이 출범했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전경련의 청부입법에 앞장섰던 대통령, 그리고 그 대가로 모금을 요구했던 대통령,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 우리 민생을 위해서도 너 이상 그 자리에 놔둘 수가 없다"며 "대통령이 그 동인의 실책과 과오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써 국민에게 사죄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질서 있게, 책임 있게 퇴진하는 길"이라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뉴스

한광욱 "영수회담 위해 대통령 국회 방문 가능"

한광욱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습을 위한 영수회담이 열릴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회 의사를 존중하시는 분"이라며 "여야의 영수, 대표들이 회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 대통령이 국회에 와도 좋다"고 말했다.

그간 영수회담은 통상 청와대에서 열린 곳 했지만 국회에서 열린 적도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정치권 예우차원에서 국회에서의 영수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또 "중리 인준 문제와 관련, 일단 국회 인준절차는 좀 봐야한다"고 요구했다. 한 비서실장은 "어려운 난국일수록 각 정당·대통령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국민이 안심한다"며 "김 총리 인준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영수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의 건강을 우려하는 이 대표에게 "상당히 침울한 상태"라고 전했다. /뉴스



"물러나라" 국민의당 초선 최경환(왼쪽부터), 이용주, 송기서, 김광수, 채이배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우병우 팔짱끼고 수사받다니...검찰준립 위협"

전해철 민주당 최고위원 "우병우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핵심 피의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소환조서에 대해 "차 마시며 답소를 나누며 팔짱끼고 수사 받고, 취재 중인 기자에게 고압적 자세를 보이는 등 검찰을 쥐타먹려한 우 전 수석의 위세가 여전히 남았음을 확인했다. 국민들은 또다시 검찰에 실망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수사 시간 조사한 후 귀가시키면서 우리 당 의원들의 우려가 현실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자금횡령과 공직자 재산신고 등에 대해서만 수사 받았지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핵심 피의자"라며 "대통령 친인척과 주변인을 관리하는 민정수석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이 게이트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최순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아가 직무유기 혐의도 수사 받아야 한다"며 "이석수 팀에서 수사받은 것이지만 최순실게이트 특별수사본부

가 우병우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해야 한다. 특별법에 의한 특별검사 수사대상에는 우병우를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지난 주말 광화문을 매운 국민의 분노가 검찰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며 "검찰이 몇몇 개인일탈로 이 사건을 마무리한다면 검찰은 또다시 수사한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재수사를 받을 불명예를 안을 것이다. 검찰 조직 자체의 존립도 위협받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뉴스

김무성, 박근혜 대통령에게 탈당 요구

"탄핵 해야 되지만 거국중립내각이 가장 좋은 대안"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7일 "대통령께서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당적을 버려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탈당을 요구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한 뒤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의 지지기반인 보수의 궤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을 향해 '헌법 훼손', '탄핵'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훼손하며 국정을 운영했다"며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직이라는 공적 권력이 최순실 일가가 국정을 농단하고,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됐다"고 박 대

통령과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파문을 '헌법 유린'으로 규정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헌법 가치를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의 길로 가는 것이 헌법정신이나,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이고 국가의 불행이자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런 만큼 국민과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해 거국중립내각으로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대다수의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요구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즉각 수용하고 총리 추천권을 국회로 넘겨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야당에서 이미 전면 거부하는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

야당, 내일 대표회동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오는 9일 당대표 회동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해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 대표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논의를 위해 공개적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연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7일 한광욱 비서실장과 면담을 갖고 기자들을 만나 "수요일(9일) 오전 10시 30분에 야당 대표 회담을 추이에 대표가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동 의제에 대해 "현 시국에 대한 입장, 대응"이라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최순실 사태와 관련 포괄적으로 의견 교환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문재인 "박 대통령, 국민 부끄럽게 말고 결단하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이제 박 대통령은 국민들을 더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 철회와 2선 퇴진 등을 재차 요구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사회원로들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 국정 공백과 혼란을 하루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스스로 내려주는 것이 박 대통령에게 남은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정치권도 마찬가지로"라며 "여당도 야당도 오늘 이런 사태를 만든 데 함께 책임이 있다는 깊은 책임감을 갖고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뜻을 정치적으로 실현해낼 수 있도록 함께 역량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국회에 주문했다.

회동 종료 후 문 전 대표 측은 "문 전 대표와 원로들은 대통령 스스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고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문 전 대표와 원로들은 이어 국회와 협의를 총리를 추천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 후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것이 해법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회동 결과를 전했다.

문 전 대표와 원로들은 특히 총리를 교체하고 개각이 이뤄지면 거국중립내각의 법무부장관에게 수사를 지휘하게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뉴스

통화녹음파일·다이어리... 최순실 게이트 '뇌관'?

다이어리와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등 불증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이 안광훈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다이어리와 휴대전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최순실씨의 통화내역을 각각 확보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지난달 29일 정 전 비서관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여러 대를 압수했고, 이 중 2대의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에서 녹음 파일을 발견하는 등 다수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오후 안광훈 전 수석의 '다이어리' 두개를 임의제출로 확보했다. 이에 더해 검찰은 안 전 수석의 휴대전화 5~6대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안 전 수석의 다이어리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과의 간담회 일정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7월 박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지원을 요구했다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 전 수석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도 마찬가지다. 아직까지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세지 등이 다수 남아있다면 안광훈-최순실-박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불법모금의 정황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또 검찰이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손에 넣으면서 지금까지 "최씨를 모른다"고 했던 정 전 비서관은 공지에 불리게 됐다.

검찰은 이 같은 구체적 불증을 토대로 최씨를 압박하고 있다. 최씨가 언제,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도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들의 입을 여는 핵심 지렛대로 사용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현재까지는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녹음 파일에서 뚜렷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뉴스